

거시통계자료를 이용한 삶의 질의 국제간 비교

이은우 · 이재기 · 김재홍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 경제학전공 · 행정학전공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거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의 변화추세를 고찰하고 이것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수준을 고찰한다. 다루는 항목은 소득수준 및 분배상태, 인구 및 교육문제, 노동시장, 주거 및 생활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등이다. 시계열자료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저발전국보다는 여러면에서 보다 나은 상태이지만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A Study on the Trend of Quality of Life in Korea : International Comparison

Lee, Eun Woo · Lee, Jae Ki · Kim, Jae Hong

Professor of Economics · Professor of Economics ·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paper, by using macro-statistical data, analyzed the trend of change in quality of life standard in Korea,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other countries. Major items analyzed in this paper are level of income and its distribution, population and education, labor market, residence and environments of life, and social welfare. According to time-series data, welfare level of Korea is steadily increasing, but it is quite low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I.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도 많이 증가하였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이 좋은 예이다. 여러 면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취약한 형편이다. 한 나라가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제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고찰하면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성장우선정책은 일부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내었다. 즉 성장의 결과 소득수준이 증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이 소요되는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성장우선주의는 환경을 파괴하는 등 삶의 질 수준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이런 면에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의 변화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삶에 질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거시지표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분석한 다음, 다른 주요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간 비교를 한다. 국제간 비교를 하는 것은 여러 경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 II장에서 분석할 내용은 소득수준 및 분배상태에 관한 것으로 여러 국가들의 소득수준과 분배상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한다. 제 III장에서는 인구, 교육 및 인간개발지수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출생률과 사망률, 그리고 인구증가율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교육에 대해 고찰하는데 여기에서는 각급학교 진학률,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한 후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인간개발지수를 이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종합분석을 한다. 제 IV장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해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그리고 주당평균근로시간 등에 대해 우리나라의 추세변화 및 국제간 비교를 한다. 제 V장에서는 주거환경부문을 다룬다. 여기서 다룰 주요 변수는 주택보급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전화보급률, 1인당 전력소비량, 그리고 승용차 보급률 등이다. 이런 변수들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계열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한다. 제 VI장에서는 복지부분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에 대해 고찰한 다음 사회보장의 예산에 대해 시계열분석 및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한다. 제 VII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소득수준 및 분배상태 분석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거시변수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변수는 일인당 소득수준과 그것의 분배상태이다.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변수들은 대부분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선 먼저 일인당

소득수준과 그 분배상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각국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국가간 비교를 하는 기관 중의 하나로 세계은행(World Bank)을 들 수 있다. 세계은행은 1994년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인당 소득이 725달러 이하인 경우를 저소득국(low-income economies), 726달러이상 8,956달러 이하인 경우를 중소득국(middle-income economies), 그리고 8,956달러 이상인 경우를 고소득국 (high-income economies)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소득국은 다시 하위중소득국(lower-middle-income economies)과 상위중소득국(lower-middle-income econom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세계은행은 자료가 수집가능한 133개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133개국 중 저소득국은 51개국, 중소득국은 57개국(이 중 하위중소득국은 40개국, 상위중소득국은 17개국), 그리고 고소득국은 25개국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4년에 일인당 소득이 8,260달러로 나타나 중소득국, 그 중에서도 상위중소득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1>은 저소득국, 중소득국, 그리고 고소득국별로 6개 국가를 택하여 일인당 소득수준과 그것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에는 보다 많은 국가가 존재하지만 세계은행은 자료 수집이 가능한 133개국을 소득수준별로 제반 경제변수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국가간의 소득수준은 많은 차이가 있다. 우간다의 경우 1994년 일인당 GNP가 190달러이지만 일본의 경우 34,630달러로 18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저소득국에 속하는 주요국가들의 1994년 일인당 GNP를 보면 인도가 320달러, 중국이 530달러, 스리랑카가 640달러, 그리고 이집트가 720달러이다. 중소득국에 속하는 주요국가들을 보면 인도네시아 880달러, 폴란드 2,410달러, 브라질 2,970달러, 멕시코 4,180달러 그리고 한국 8,260달러이다. 한국은 1994년의 경우 중소득국 중에서 제일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1995년에 경제성장과 원화의 절상 효과에 의하여 일인당 GNP가 만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다음으로 고소득국에 속하는 국가들을 보면 1994년의 일인당 GNP가 영국 18,340달러, 프랑스 23,420달러, 미국 25,880달러, 그리고 일본 34,630달러이다.

물론 일인당 GNP가 차이가 나는 만큼 삶의 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인당 GNP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개 달러화로 나타내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각국 화폐로 나타난 소득수준을 달러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재화는 교역재(traded goods)와 비교역재(non-traded goods)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환율에는 교역재만 반영되고 비교역재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역이 되는 공산품 등은 국가간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교역이 되지 않는 서비스 등은 많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간 교역이 되는 전자제품은 가격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교역이 되지 않는 택시 요금은 많은 차이가 난다. 즉 환율에는 교역재만 반영되기 때문에 일인당 GNP의 차이만큼 생활수준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간다와 일본의 일인당 GNP가 180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생활수준이 180배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비교역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한 일인당 GNP의 차이만큼 생활수준의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저소득국과 중소득국, 중소득국과 고소득국 사이에는 소득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생활수준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이 후진국에 비해 비교역재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득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 국가의 소비수준은 그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한국은 주거비나 서비스 품목 등 일부 비교역재 가격이 타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직도 소득수준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생활하는데 물가는 선

진국보다 결코 낮지 않는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 주요국가의 1994년 일인당 GNP와 그 순위

저소득국		중소득국		고소득국	
우간다	190달러(125)	인도네시아	880달러(79)	영국	18,340달러 (19)
인도	320 " (111)	필리핀	950 " (78)	이태리	19,300 " (17)
니카라과아	340 " (107)	콜롬비아	1,670 " (62)	캐나다	19,510 " (15)
잠비아	350 " (106)	폴란드	2,410 " (53)	프랑스	23,420 " (10)
중국	530 " (95)	브라질	2,970 " (42)	미국	25,880 " (6)
스리랑카	640 " (89)	멕시코	4,180 " (33)	노르웨이	26,390 " (5)
이집트	720 " (86)	한국	8,260 " (26)	일본	34,630 " (3)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

주 : ()안은 133개국 중 일인당 GNP 순위를 나타냄

이제 소득분배상태를 고찰하기로 한다. 절대적인 소득수준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분배상태도 각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분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 결과 소득분배 실태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마다 다른 추정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연구자마다 소득분배에 대해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추정되었으며, 각 연구자마다 추정된 지니계수 값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KDI의 추정치와 통계청의 추정치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타 연구에 비해 광범위한 원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KDI 팀은 1965, 1970, 1976, 그리고 1982년의 지니계수를 추정했다. 그 뒤 1986년과 1990년의 지니계수를 추정했지만 이것은 이용한 자료의 제약상 앞의 연구보다는 신뢰성이 낮다. 이 연구는 가구를 농가와 비농가로 나누어 각각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에서도 1980, 1985, 1988, 그리고 1993년의 십분위분배율과 지니계수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역을 군부와 시부로 나누어 각각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있다.

<표 2>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3년의 소득십분위별 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이다. 이것은 1997년 현재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니계수 중 최근의 값이다. 전국의 지니계수는 0.3097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는 지역을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시부의 지니계수는 0.3063, 그리고 군부의 지니계수는 0.3101이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이하인 경우를 시불평등도, 0.4부터 0.5이하인 경우를 중불평등도, 그리고 0.5보다 큰 경우를 고불평등도라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0.3063이라는 것은 소득분배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 소득십분위별 소득분포 및 지니계수(1993)

	지 역		
	전 국	시부(도시)	군부(농촌)
1분위	2.75	2.90	2.46
2분위	4.72	4.80	4.61
3분위	5.95	6.01	5.94
4분위	7.00	7.04	7.05
5분위	8.08	8.07	8.16
6분위	9.27	9.20	9.41
7분위	10.57	10.49	10.86
8분위	12.37	12.25	12.76
9분위	15.04	14.93	15.48
10분위	24.25	24.31	23.28
지니계수	0.3097	0.3063	0.3101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이제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니계수의 변화추세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것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에서 1966, 1970, 1976, 그리고 1982년의 값은 KDI팀의 추계치이고, 1980, 1985, 1988, 그리고 1993년의 값은 통계청의 추계치이다. 다른 연구자가 추계한 값을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이 값으로 소득분배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KDI 팀은 가구를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고 있고 통계청은 군부(농촌)와 시부(도시)로 구분하고 있다. 양자간에 서로 분류기준이 다르다. 즉 하나는 직업별로 분류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여시서는 본 연구에서는 농가와 군부를 같은 그룹으로 묶고, 비농가와 시부를 같은 그룹으로 묶어 분석하기로 한다.

전국의 지니계수를 보면 1965년에는 0.3439, 1976년에는 0.3908, 1980년에는 0.3891, 1985년에는 0.3449, 그리고 1993년에는 0.3097로 나타났다.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그 이전에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저소득수준에서 분배상태가 보다 평등하였으나 1960년대 들어 공업화가 진행되고 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도 활발히 이루어져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도시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1980년대 중반이후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반론도 많다. 그러나 통계청의 발표에는 소득분배가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느 주장이 합당한지를 차지하고라도 우리는 1980년대 후반이후 소득분배를 개선시킨 뚜렷한 움직임은 부정할 수 없다. 즉 19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성별, 학력별, 직종별 임금격차가 많이 완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지역간 지니계수, 즉 시부(도시)와 군부(농촌)간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1988년까지는 계속 농촌이 도시보다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할 경우 도시에 비해 농촌이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농촌에서는 직업의 종류가 도시에 비해 단순해 개인간의 소득격차가 별로 크지 않지만 도시에서는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고 같은 직종내에서도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년의 지니계수를 보면 농촌이 도시보다 소득분배가 보다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까지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물론 현상태에서 도시가 농촌보다 평등하다는 주장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농촌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李殷雨(1995)의 연구에서도 농촌이 도시보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에서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은 다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농촌에는 다수의 노년층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생활능력이 거의 없다. 반면 농촌 중의 일부 지역, 특히 읍지역에는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 농촌거주자 중 비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의 일부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중의 일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다. 즉 농촌에는 다수의 빈곤층이 존재하는 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소득층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지니계수의 변화추세

연 도	전 국	비농가(시부)	농가(군부)
1965	0.3439	0.4167	0.2852
1970	0.3322	0.3455	0.2945
1976	0.3908	0.4118	0.3273
1980	0.3891	0.4053	0.3555
1982	0.3574	0.3705	0.3061
1985	0.3449	0.3694	0.2969
1988	0.3355	0.3496	0.2895
1993	0.3097	0.3063	0.3101

자료: 주학중, 윤주현(1984), 통계청(1995)

주: 1982년까지의 지니계수는 주학중, 윤주현(1984)의 추계이고 그 이후의 추계는 통계청(1995)의 추계임

<표 4>는 <표 1>에 나타난 국가들의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수준과 분배상태를 동시에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4>에 나타난 각 값은 십분위분배율로 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비율을 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비율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나타낸다. 십분위분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상태가 보다 평등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4>의 십분위분배율의 값은 국가별로 추정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불평등지수는 자료의 신빙성 문제, 소득개념의 차이, 그리고 소득기간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분배상태의 국제비교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지만 <표 4>를 이용하면 대체적인 추세는 알 수 있다. 먼저 소득수준이 낮고 분배도

불평등한 국가는 우간다, 니카라구아, 잠비아 등이다. 소득수준은 낮으나 분배가 평등한 국가로는 인도, 스리랑카, 이집트 등을 들 수 있다. 중소득국가에 속하는 국가인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은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소득국가 중 분배가 불평등한 국가로는 영국을 분배가 불평등한 국가로는 노르웨이,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소득분배가 대체로 양호한 상태에 속한다. 소득수준도 중소득국 중 최고 수준이고 분배상태도 대체로 양호하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분배상태 측면에서의 우리 한국의 삶의 질은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세계주요국가의 십분위분배율(하위 40%계층 소득/상위 20%계층 소득)

저소득국		중소득국		고소득국	
우간다(1992)	35.6	인도네시아(1993)	51.6	영국(1988)	33.0
인도(1992)	48.4	필리핀(1988)	34.7	이태리(1986)	45.9
니카라구아(1993)	22.1	콜롬비아(1991)	20.1	캐나다(1987)	43.5
잠비아(1993)	23.6	폴란드(1992)	63.1	프랑스(1989)	41.3
중국(1992)	38.0	브라질(1989)	10.4	미국(1985)	37.5
스리랑카(1990)	56.0	멕시코(1992)	21.5	노르웨이(1979)	51.8
이집트(1991)	51.6	한국(1993)	52.0	일본(1979)	58.4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4.

- 주: 1) 위의 각 값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비율을 상위 20% 계층의 소득비율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임
- 2) ()는 소득분배상태를 측정하는 연도를 나타냄

III. 인구, 교육 및 인간개발지수

이 절에서는 인구 및 보건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삶의 질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이유는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은 인구 및 보건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삶의 질을 나타내는 많은 지표들은 평균수명을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와와는 상당한 정도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증가 패턴과 경제발전 단계와의 관계는 3단계로 구분한다. 제 1단계는 고출생률, 고사망률의 단계이다. 즉 출생률은 높으나 의료수준이 낮아서 출생아 중 많은 비율이 사망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인구증가율은 낮게 된다. 다음으로 제 2단계 즉 고출생률, 저사망률의 단계이다. 이것은 출생률은 아직 계속 높으나 의료수준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사망률이 낮아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인구증가율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많은 발전도상국들이 아직 이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저출생률, 저사망률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도 인구증가율은 낮아지게 된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사망률 지하에 대해서는 3단계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20세기 초에 해당되는 것인데 법과 질서과 확립되고 그리고 수송시설이 확충되어 식량의 수

송과 배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즉 식량부족지대에 식량공급이 원활해져 기아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저하된 시기이다.

다음 단계는 공중위생시설이 확립되고부터이다. 즉 도시지역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확충되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예방접종이 보편화되면서 이제까지 사망률을 크게 높였던 전염병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된 시기이다. 예를 들면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등 과거에 자주 발생했던 전염병들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병원과 기타 의료시설이 크게 보급된 단계로 선진국의 대부분과 일부 발전도상국에서 의료시설이 급속히 확충됨에 따라 사망률이 급속히 하락한 시기이다.

출생률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비용-편익(cost-benefits)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는 수익에 비해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Hogendorn, 1992, pp. 274-276). 첫째, 현대 선진국의 가정은 주택이나 직장관계로 과거의 농경사회에 비해 이동성이 심하다. 이 경우 다수의 자녀를 갖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현대 선진국에서는 예전에 비해 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갖는다. 둘째, 자녀 이외에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다. 예를 들면 TV, 영화, 음악, 여행 이외에 많은 소비재들이 있다.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셋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되게 된다. 이제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노후보장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노후보장책으로서의 자녀 양육은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넷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가 많이 증가한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의, 식, 주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 다섯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여자들의 교육수준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취업기회가 증가한다. 이것은 여자들의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런 이유에서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리고 여자들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피임법 등을 보다 잘 숙지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에서도 여자들의 교육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소득분배가 평등해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분배상태가 평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제까지의 논의의 내용으로 보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낮고 발전도상국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국제간 인구증가율을 비교함으로써 각 국가의 발전상태의 한 단면을 보고자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연도별 인구증가율을 알아보기로 하자. <표 5>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률, 사망률, 그리고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인구증가율은 해외로의 유출이나 유입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증가율을 나타낸다. 1970년의 경우 조출생률은 인구 천명당 32.1명이고 조사망률은 9.4명이어서 인구증가율은 22.7명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율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 1990년의 경우 조출생률은 인구 천명당 15.3명이고 조사망률은 5.7명

이어서 인구증가율은 9.5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구증가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인구증가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거의 선진국형의 인구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천명당 인구증가율이 22.7명인 경우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데 32년이 소요되고 인구증가율이 9.5명인 경우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데 약 76년이 소요된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증가율이 천명당 증가율이 22.7명에서 9.5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인구증가율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 연도별 인구증가율

	조출생률 (인구 천명당)	조사망률 (인구 천명당)	인구증가율 (인구 천명당)
1970	32.1	9.4	22.7
1975	24.6	7.6	17.0
1980	23.4	6.7	16.7
1985	16.2	6.0	10.2
1990	15.3	5.7	9.5
1994	16.5	5.5	11.0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이제 교육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학적 측면에서 교육을 보는 시각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이정우, 1997, pp. 92-133).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인적자본이론이다. 이것은 교육에 의해 형성되어 인간에게 구체화된 지식 및 기능을 인적자본으로 보는 것이다. 즉 교육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보는 것이다. 인적자본의 축적량이 많아지면 실물자본의 축적량이 많아지는 경우와 같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량이 많아지게 되면 각 개인의 소득수준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다음으로 선별가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능력이 있는 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은 단지 능력있는 자와 능력없는 자를 가려내는 신호(signal)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거의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 하면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능하고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경우 각 개인은 자기의 능력을 고용주에게 알리기 위해 교육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급진파의 시각이다. 이것은 교육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교육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며, 이와 함께 교육은 체제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교육을 보는 여러 시각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물론 급진파의 시각도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주류경제학의 입장이고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각 개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각 개인의 소득수준도 상승하고 그 결과 각 개인의 삶의 질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론 교육은 이런 기능이 아니더라도 자아 실현의 기능 등 보는 관점에 따라 그 기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위의 입장 중 급진파의 시각은 극히 소수파의 입장이고 인적자본론의 입장이나 선별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수준은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간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학력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의 실태에 대해 연도별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교육분야에 대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6> 연도별 진학률 및 졸업자

단위 : %, 천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률
1970	780	66.1	313	70.1	145	26.9	24	4.6
1975	925	77.2	569	74.7	263	25.8	34	6.5
1980	874	95.8	742	84.5	467	27.2	50	12.2
1985	940	99.2	856	90.7	642	36.4	119	10.4
1990	764	99.8	836	95.7	762	33.2	166	7.7
1994	848	99.9	736	98.8	688	45.3	180	8.3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먼저 <표 6>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진학률 및 졸업자수를 나타낸다. 먼저 중학교 진학률을 보면 1970년에는 66.1%이었으나 1985년부터 99% 이상이 되었다. 1994년 현재 중학교 진학률은 99.9%로 거의 100%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졸업생은 거의 대부분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의 의무교육은 도시지역, 농촌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지역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모든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1970년에는 70.1%의 진학률을 나타내었으나 1994년에는 98.8%의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학교 진학률이 99.9%이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98.8%라는 사실은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진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교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보면 1970년에는 26.9%이었으나 1994년에는 45.3%로 높아져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절반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대학입학에 대해서는 계속 초과수요상태였다. 즉 대학입학정원에 비해 대학응시자수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희망하더라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대학정원이 계속 증가할 추세이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1970년과 1994년, 즉 24년 사이에 각급학교 졸업자 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졸업자수는 1.1배로 거의 변화가 없다. 중학교 졸업자수는 24년 사이에 2.4배,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4.7배, 대학교 졸업자수는 7.5배 증가하였다. 물론 졸업자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감안하더라도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각급 학교 졸업자수를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어느정도인가 알기 위해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7>은 <표 1>에 나타난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의 교육정도별 취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난 각 국가는 소득수준별, 대륙별로 안배한 것이다. 한국은 1994년의 경우 취학률이 초등교육 98%, 중등교육 96%, 고등교육 51%이다. 중등교육 취학률이 96%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등교육 즉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위한 취학률이 51%인데 이것은 미국의 81%보다는 낮지만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위한 취학률이 높다는 사실은 교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7>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다른 후진국은 고등교육은 물론 중등교육을 위한 진학률도 상당히 낮다. 우간다의 경우 중등교육 취학률은 11%, 고등교육 취학률은 1%이고, 중국의 경우 중등교육 취학률은 55%, 고등교육 취학률은 4%이다.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 즉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각 국가들은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을 위한 취학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급학교 취학률 면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7> 주요국가의 교육정도별 취학률 단위 : %

국가	연도	학년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우간다	1993	-	67	11	1
중국	1993	27	118	55	4
스리랑카	1992	-	106	74	6
인도네시아	1992	18	114	43	10
콜롬비아	1993	22	119	62	-
폴란드	1993	42	98	84	26
멕시코	1993	65	112	58	14
한국	1994	80	98	96	51
영국	1992	112	96	92	37
프랑스	1993	84	106	106	50
미국	1993	62	107	97	81
일본	1993	49	102	-	-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 주: 1) 취학률은 실제 취학자수를 각국 세도상의 취학적령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조기취학, 만학, 연령별 인구 추계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실제 취학자수가 취학적령인구보다 많은 경우 취학률이 100%를 넘는 경우가 발생함
 2) 고등교육은 종합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초급대학 이상의 교육을 의미함
 3) 표에 나타난 국가의 순서는 1994년 일인당 GNP 순서임

<표 8>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8>에 나타난 국가는 <표 7>에 나타난 국가와 똑 같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표 7>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995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교육은 28명, 중등교육은 23명, 그리고 고등교육은 26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1980에는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7.5명이었고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5.1명이었다. 즉 15년 동안에 이렇게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취학 학생수가 감소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급수와 교사수가 증가한 때문이다.

<표 8> 주요국가의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국가	연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우간다	1993	35	16	12
중국	1993	31	15	9
스리랑카	1993	29	21	17
인도네시아	1992	18	14	15
콜롬비아	1993	24	21	9
폴란드	1993	13	19	-
멕시코	1993	25	16	9
한국	1995	28	23	26
영국	1992	35	-	17
프랑스	1993	24	13	-
미국	1993	-	15	17
일본	1993	19	16	10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주: 표에 나타난 국가의 순서는 1994년 일인당 GNP 순서임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초등교육의 경우는 우간다와 영국이 35명, 중국이 31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보다 높지만 다른 나라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적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표 8>에 나타난 국가 중 우리나라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제일 많다. 고등교육, 즉 초급대학 이상의 교원 1인당 학생수도 <표 8>에 나타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 <표 8>에는 각 대륙별로 선진국, 후진국 모두 나타나 있는데 후진국보다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급학교 취학률은 아주 높은 편에 속하지만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양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질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지표의 하나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가지고 각 국가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인간개발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의 수명, 교육수준, 국민소득 등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인간개발성취의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이다. 여기서 수명은 각 연도에 태어나는 아이의 기대수명을 나타내고, 교육수준은 성인의 문자해독률(2/3 비중)과 평균교육연수(1/3 비중)를 가중평균한 것이고, 국민소득은 일인당 소득을 각국 화폐의 구매력으로 조정된 것을 나타낸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HDI정도를 점수화하는데 최고점은 1점, 최저점은 0점이다. 이것은 1990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1990년에는 160개국가의 HDI가, 그리고 1992년에는 174개국의 HDI가 발표되었다.

<표 9>에는 주요국가들의 1992년의 HDI가 나타나 있다.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HDI는 174개국 중 31위를 차지하고 있다. HDI와 1인당 GDP(구매력 기준)와의 관계를 비교해

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으면 HDI 수준도 올라가나 반드시 그 관계가 비례관계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구매력 기준으로 소득수준은 38위이나 HDI 수준은 31위이다. 우리나라는 문자해독률이 높고 취학률이 높기 때문에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HDI가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주요국가의 1992년의 인간개발지수(HDI)

국 가	기대수명 (세)	성인문자 해독률(%)	총취학률 (%)	1인당GDP(\$) (구매력기준)	인간개발 지수(HDI)	HDI 순 위
콜롬비아	69.3	90.3	67	5,480 (60)	0.836	57
폴란드	71.1	99.0	75	4,830 (71)	0.855	51
멕시코	70.8	88.6	65	7,300 (47)	0.842	53
한국	71.1	97.4	79	9,250 (38)	0.882	31
영국	76.2	99.0	77	17,160 (23)	0.916	18
프랑스	76.9	99.0	86	19,510 (11)	0.930	8
미국	76.0	99.0	95	23,760 (!)	0.937	2
일본	79.5	99.0	77	20,520 (8)	0.937	3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IV. 노동시장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변화상태를 들 수 있다. 우리 일상사 중 활동하는 시간의 많은 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여러 상태는 각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효용함수의 변수로 주로 드는 것은 각 개인의 소득수준과 여가상태이다. 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각 개인의 소득수준은 증가하겠지만 여가시간이 감소하여 각 개인의 효용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만약 한 개인이 실업상태에 있다면 취업자에 비해 여러모로 삶의 질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먼저 소득수준이 저하되어 소비수준이 낮아진다. 소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수준의 저하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실업이 되면 각 개인은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것은 각 개인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생산성 저하는 다시 소득감소로 연결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정치불안과 사회안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그 사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삶의 질 수준의 변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상태를 연도별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이것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10>은 연도별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낸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970년 57.6%, 1980년 59%, 1990년 60.0%, 그리고 1995년 62.0%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남자의 경우 1970년 77.9%, 1985년 72.3%, 그리고 1995년 76.5%로 감소추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자의 경

우 1970년 39.3%, 1980년 42.8%, 1990년 47.0%, 그리고 1995년 48.3%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이것에서 보듯이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게 된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가사노동보다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또 여자들의 취업 기회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여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실업률을 고찰하기로 하자. 실업률을 보면 1970년 4.4%, 1985년 4.0%, 그리고 1995년 2.0%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업의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실업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실업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그러나 그 추세는 알려주고 있다고 본다. 1995년의 실업률이 2.0%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취업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부문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취업여건은 좋아졌다. 물론 이런 현상은 3D 업종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고 대졸 실업자는 여전히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취업상태가 양호하게 되어 삶의 질 수준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을 보면 뚜렷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당근로시간은 1970년에 51.6시간이었는데 1980년에도 51.6시간으로 변화가 없다. 이것이 1990년에는 48.2시간, 그리고 1995년에 47.8시간으로 현저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1987년 이후 노조설립이 활성화되고 그 이후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근로조건이 향상된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후 노동시장 변화는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그리고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근로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면에서의 삶의 질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연도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시간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평균근로시간
	전체	남	여		
1970	57.6	77.9	39.3	4.4	51.6
1975	58.3	77.4	40.4	4.1	50.0
1980	59.0	76.4	42.8	5.2	51.6
1985	56.6	72.3	41.9	4.0	51.9
1990	60.0	74.0	47.0	2.4	48.2
1995	62.0	76.5	48.3	2.0	47.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11>은 주요국가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낸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국가간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뚜렷한 추세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국가유형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국가별 여자의 경

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스리랑카 38.1%, 이집트 22.8%, 필리핀 47.3%로 저소득국은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고소득국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영국 52.8%, 미국 58.2%, 노르웨이 62.8%, 그리고 일본 50.3%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간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실업률을 고찰하기로 하자. 실업률은 국가유형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저소득국의 실업률을 보면 스리랑카 13.6%, 이집트 9.0%, 필리핀 8.4%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고소득국의 실업률을 보면 영국 10.2%, 프랑스 12.5%, 미국 6.1%, 그리고 일본 2.9%로 실업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2.4%로 <표 11>에 나타난 국가 중 제일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제일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이 제일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이유는 무엇보다 실업통계의 작성방법에서 연유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의하면 취업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조사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수입이 없더라도 가족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한 자 등이다. 농양사회는 서양사회와는 달리 가족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집안 일을 조금 돕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체는 실업자이면서 취업자로 조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자는 분명하게 노출되거나 반대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국가에서는 실업자가 보다 작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는 실업률 자체는 낮지만 불완전취업의 경우가 많아 양적인 면에서의 취업상태는 양호하지만 질적인 면에서의 취업상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당근로시간은 저소득국과 고소득국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난다. 스리랑카 52.6시간, 이집트 52.0시간, 그리고 필리핀 47.4시간으로 저소득국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비교적 길다. 이에 반해 프랑스 38.7시간, 미국 42시간, 노르웨이 36.9시간, 그리고 일본 37.6시간으로 고소득국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비교적 짧다. 우리나라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8.7시간으로 스리랑카나 이집트에 비해 낮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긴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노동시장 부문의 삶의 질 수준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주요국가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시간

국가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평균근로시간(제조업)
		전체	남	여		
스리랑카	1994	57.0	76.7	38.1	13.6	52.6
이집트	1992	47.2	70.7	22.8	9.0	52.0
필리핀	1994	64.4	81.6	47.3	8.4	47.4
멕시코	1993	59.4	85.0	35.8	3.4	41.4
한국	1994	61.7	76.4	47.9	2.4	48.7
영국	1993	62.4	72.7	52.8	10.2	43.1
프랑스	1994	54.9	62.8	47.6	12.5	38.7
미국	1994	66.1	74.7	58.2	6.1	42.0
노르웨이	1994	68.6	74.3	62.8	5.4	36.9
일본	1993	63.8	78.0	50.3	2.9	37.6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주: 표에 나타난 국가의 순시는 1994년 일인당 GNP 순시임

V. 주거환경부문

이 절에서는 주거환경부문의 삶의 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상황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주택은 인간생활에 가장 필요한 품목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표 12>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현황을 나타낸다. 1970년과 1995년을 비교해 볼 경우 가구수는 2.0배, 주택수는 2.2배 증가했다.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1970년의 78.2%이었으나 1995년에는 86.1%로 높아졌다. 즉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직도 도시지역에는 주택이 많이 부족하지만 과거에는 이 부족상태가 보다 심각하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고 그 결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을 한 결과이다. 국민총생산에서 주택부문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주택투자율은 1970년의 5.9%에서 1995년의 7.9%로 높아졌다.

1970년대 이후 주택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해는 1990년이다. 연간 주택건설호수가 750전호이고 주택투자율도 가장 높은 8.2%이다. 이렇게 주택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진 이유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국제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져, 정부가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다.

<표 12> 주택보급현황

단위 : 천호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	연간주택 건설호수	주택투자율 (%)
1970	5,576	4,360	78.2	115	5.9
1975	6,367	4,734	74.4	180	6.1
1980	7,470	5,319	71.2	212	5.9
1985	8,751	6,104	69.8	227	4.4
1990	10,167	7,357	72.4	750	8.2
1995	11,131	9,579	86.1	619	7.9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이제 주변생활여건의 변화실태를 고찰하기로 하자. 여기서 고찰할 것은 도로포장률과 상수도보급률, 전화보급률, 일인당 전력소비량 그리고 승용차 보급률 등이다.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들 다섯가지의 변수로 생활환경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기로 한다.

먼저 도로포장률을 고찰하기로 한다. 도로포장률은 총도로의 연장 중 포장된 도로의 비율을 나타낸다. 1970년에는 도로포장률이 9.6%이었으나 1975년에는 22.3%로 높아지고 이것이 1995년에는 76.0%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현재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24.0%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생각된다. 즉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도로포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도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수도보급률은 전체인구 중 급수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상수도보급률은 1970년에는 33.2%이었으나 1975년에는 42.4%로 높아지고 1995년에는 82.9%의 비율을 높여졌다. 도로 포장률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상수도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해왔으나 상수도를 보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아직도 17.1%가 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1995년의 상수도보급률을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99.9%, 부산 97.4%, 그리고 광주 93.2% 등 광역시 이상 대도시 지역에서는 93%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농촌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충남 43.2%, 전남 47.5%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전화보급률을 파악하기로 하자. <표 13>에 나타난 전화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전화보급대수를 말한다. 1970년에는 인구 100명당 1.5대이었으나 1975년에는 3.0대가 되었고 1980년에는 7.1대 그리고 1995년에는 41.5대가 되었다. 즉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전화가 보급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파악하게 할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일인당 전력소비량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반 가전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인당 전력 소비량의 변화추세를 보면 1970년에는 240KWH이었으나 1975년에는 471KWH, 1985년에는 2,202KWH로 증가하고, 이것이 1995년에는 3,640KWH로 증가했다. 즉 25년 사이에 일인당 전력소비량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제 승용차 보급률, 즉 인구 천명당 승용차 보급대수를 파악해보기로 하자. 1970년에는 인구 천명당 0.8대이었으나 1975년에는 1.4대로 증가하고 이것이 1985년에는 11.0대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1995년에는 128.2대로 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승용차가 급속히 보급되어 자차용 대중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도로보급률, 상수도보급률, 전화보급률, 1인당 전력소비량, 그리고 승용차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하더라도 도로망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상수도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그리고 전화도 거의 보급되지 않아 생활하기에 여러모로 불편한 환경이었다. 이와 함께 승용차도 거의 보급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전제품의 보급률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95년의 상황은 이런 면에서는 여러모로 편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연도별 생활여건의 변화

연도	도로포장률 (%)	상수도보급률 (%)	전화보급률(백명당 전화대수)	1인당 전력소비량(KWH)	승용차보급률(천명당 대수)
1970	9.6	33.2	1.5	240	0.8
1975	22.3	42.4	3.0	471	1.4
1980	33.2	54.6	7.1	859	4.7
1985	49.6	66.6	16.0	1,243	11.0
1990	71.5	78.5	31.0	2,202	44.4
1995	76.0	82.9	41.5	3,640	128.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표 14>는 우리나라의 생활여건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한 것이다. 생활여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도로포장률, 도로밀도, 전화보급률, 그리고 승용차 보급률을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도로포장률과 도로밀도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각 국가의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도로포장률을 고소득국이 저소득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기 때문에 고소득국이면서도 도로포장률 58%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100%의 도로포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포장률은 78%로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못하지만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도로밀도, 즉 국토면적 1 Km²당 도로길이(단위 : Km)를 보면 대체로 저소득국보다는 고소득국이 높지만 각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들은 도로밀도가 낮다. 고소득국이면서도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은 0.64, 노르웨이는 0.2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도로밀도는 1.58, 프랑스는 1.47, 그리고 일본은 3.01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0.74로 <표 14>에 나타난 국가 중 중간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전화보급률, 즉 인구 100명당 전화대수는 저소득국과 고소득국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난다. 먼저 저소득국의 경우를 보면 인도는 0.9, 짐바브웨는 1.2, 필리핀 1.3으로 아주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득국의 경우를 보면 폴란드 11.5, 멕시코 8.8, 그리고 한국 37.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노르웨이, 그리고 일본은 전화보급률이 모두 40.0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거의 인구 2명당 전화 1대가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의 전화보급률이 37.8이라는 사실은 전화보급 면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승용차 보급률, 즉 인구 1,000명당 승용차 보급대수를 고찰하기로 한다. 승용차 보급률도 국가유형간에 많은 차이가 난다. 인도의 승용차 보급률은 4, 짐바브웨 39, 필리핀 8로 저소득국이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득국의 승용차 보급률을 보면 폴란드 185, 멕시코 89, 한국 116으로 저소득국보다는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고소득국가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 431, 미국 565, 일본 341로 가구당 승용차가 수대씩 소유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생활여건 면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고찰해 보면 전화보급률 면에서는 선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도로포장률, 도로밀도, 그리고 승용차 보급률 면에서는 저소득국보다는 낮지만 고소득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표 14> 주요 국가의 생활여건 실태

국 가	연 도	도로포장률 (%)	도로밀도 (Km/Km ²)	전화보급률(백명 명당전화대수) ²⁾	승용차보급률 (천명당 대수)
인도	1993	48	0.61	0.9	4
짐바브웨	1993	17	0.23	1.2	39
필리핀	1994	-	0.54	1.3	8
폴란드	1994	65	1.18	11.5	185
멕시코	1993	36	0.13	8.8	89
한국	1994	78	0.74	37.8	116
영국	1993	100	1.58	49.4	355
프랑스	1994	100	1.47	53.6	431
미국	1993	58	0.64	57.4	565
노르웨이	1994	73	0.28	54.2	380
일본	1994	73	3.01	46.8	341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 주 : 1) 표에 나타난 국가의 순서는 1994년 일인당 GNP 순서임
- 2) 선화보급률은 모두 1993년의 값임

VI. 복지부문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원래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 체제는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자유경쟁의 결과 다수의 실업자 및 빈곤층이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각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제도로 정착되고 그리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대다수의 노년층은 생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보다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의 기술과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국민계층, 주로 근로자 및 그 가족을 각종 위협, 즉 질병, 상해, 고도장해,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해 그들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기금을 부과하고 또한 급부와 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각종 위협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수입의 중단은 개인의 문제일 뿐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각종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개인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보험의 특징, 즉 개인보험과는 다른 특성으로는 공적관리, 강제가입, 국고보조 등을 들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그것을 관장하는 경영주체가 사적기관이 아닌 공적기관, 즉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 집단적으로 가입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국고로부터 일부 자금을 보조받는다.

사회보험의 한계점, 즉 문제점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은 각 개인의 생활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즉 고용보험은 각 개인이 실업이 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각 개인은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각종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총수입의 범위 내에서 총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에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특히 농민과 도시영세민들이 여러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의 제약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이것의 내용은 <표 15>에 개괄적으로 나타나 있다. 먼저 특수직역의 연금보험에는 공무원 연금보험,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보험이 있다. 공무원 연금보험은 1960년에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공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군인 및 선거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고도장해 및 사망시 연금을 지불한다. 군인연금은 1963년 공무원 연금제도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지원에 의해 임용된 하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197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고도장해 및 사망시 연금을 지불한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업무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이것은 196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상해보상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의 연금수혜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연금은 노령, 고도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험은 1977년부터 일부 사업장부터 시작되어 1989년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확대 정착되었다. 의료보험체계는 직장, 공무원 및 교원, 직종,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되었을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995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근로자는 경제전체의 불황, 기업의 사정, 근로자 자신의 사정에 의해 실업지각될 수 있다. 이런 실업상태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이다.

<표 15>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개관

구 분	제 도 개 요	실시연도	비 고
특수직역 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금지급	1960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시 장해 요양급여 등 지급	1964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장해 사망시 연금 지급	1988	
의료보험	질병·부상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	1977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급여 지급	1995	

자료: 이원덕 외(1995), p. 465.

이제 공적부조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공적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준격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생활능력이 결여되어 의식주와 같은 기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다. 반면에 공적부조제도는 필요한 재원의 전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극히 곤궁한 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를 보조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일정한 생활보조를 하고 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그리고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또는 이들과 50세이상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를 선정한다. 시설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세대가 아닌 세대의 근로자가 선발된다.

<표 16>은 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나타낸다. 1996년의 경우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20만원 이하, 세대당 재산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된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996년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22만원 이하, 세대당 재산액이 2,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연도별로 매년 그 금액이 증가해 왔다.

<표 16> 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988	1990	1992	1994	1996
1인당 월소득	거택보호	44	48	80	160	200
	자활보호			100	170	220
재산액 (세대당)	거택보호	3,200	3,400	10,000	17,000	25,000
	자활보호				20,000	27,000

자료 : 보건복지부, 『保健福祉白書』, 1996.

<표 17>은 생활보호대상자 추이를 나타낸다. 1988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수가 231만명이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시설보호가 7만5천명, 거택보호가 31만8천명, 자활보호가 191만7천명이었다. 생활보호대상자수는 계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 1996년에는 150만6천명이 되었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 시설보호가 7만6천명, 거택보호가 29만6천명, 그리고 자활보호가 113만4천명이었다. 그동안 시설보호대상자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거택보호대상자수는 조금 감소하고 자활보호대상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표 17> 생활보호대상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88	1990	1992	1994	1996
합 계	2,310	2,256	2,176	1,902	1,506
시설보호	75	81	83	81	76
거택보호	318	340	338	320	296
자활보호	1,917	1,835	1,755	1,501	1,134

자료 : 보건복지부, 『保健福祉白書』, 1996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심신장애자복지, 부랑인 선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예산의 추세를 파악해보기로 하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표 18>에 나타나 있다. 1980년의 경우 정부예산은 6조4670억원이었는데 이 중 사회복지예산액은 173억원으로 정부예산 중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보장 예산의 절대금액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1985년에는 사회보장예산액은 397억원으로 정부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증가했다. 1990년에는 사회보장예산액은 1,143억원이고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증가했고 1995년에는 사회보장예산액은 2,925억원이고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증가했다.

즉 이제까지의 전반적인 추세는 정부예산액도 매년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예산액의 증가율은 정부예산액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 미미하지만 정부는 사회복지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이 GDP의 20%내외인 것을 생각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정부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게 된다. 즉 사회복지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는 0.5%이었으나 1995년에는 0.8%수준으로 증가했다.

<표 18> 사회복지 예산추세

연도	정부예산액 (십억원)	사회보장예산액 (십억원)	정부예산대비 (%)	GDP대비 (%)
1980	6,467	173	2.7	0.5
1985	12,532	397	3.2	0.5
1990	27,456	1,143	5.4	0.8
1995	51,881	2,925	5.6	0.8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알기 위해 외국과의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표 19>에 나타나 있다. <표 19>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의 제약상 이 표에는 선진국만 나타나 있고 저발전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표에 나타난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은 너무 낮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비율을 볼 경우 우리나라는 0.9%에 불과하나 미국은 7.7%, 영국은 6.2%, 독일은 10.8%, 프랑스는 17.7%, 이탈리아는 7.9%, 캐나다는 9.1%, 그리고 일본은 10.0%로 나타났다. <표 18>과 <표 19>를 비교해 볼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그러나 선진국과의 비교를 해볼 경우 그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GNP대비 사회복지급여 비율

단위 : %

국가	연도	비율	국가	연도	비율
한국	1994	0.9	프랑스	1991	17.7
미국	1991	7.7	이탈리아	1991	7.9
영국	1991	6.2	캐나다	1991	9.1
독일	1991	10.8	일본	1992	10.0

자료 : 김상균(1996), pp. 242에서 재인용

VII. 결 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삶의 질과 관련된 제반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동시에 주요 외국과의 현황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시계열 자료를 관찰할 때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간 비교를 하면 다수의 발전도상국보다는 여러 면에서 좋은 현상을 나타내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아직도 그 실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지나친 중심을 둔 결과 여러 면에서 삶의 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외향적인 성장보다는 국민생활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하는 제반 경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Gruen, Fred, *The Quality of Life, the National Interest and the Role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344,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6.
- Hagenaars, A.M. *The Perception of Poverty*,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1986.
- Hogendorn, Jan S., *Economic Development(2nd ed.)*,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2
- Kwon, Soonwon, *A Survey of the Quality of Life in the EXCAP Region(The Republic of Korea)*, Working Paper No. 9211, Korca Development Institute.
- Todaro, M. P., *Economic Development(6th ed.)*,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6.
- 高景錫, “健康한 삶 : 醫療福祉 側面의 삶의 質,” 『韓國行政研究』, 第5分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1996.
- 權純源 外, 『分配不均等의 實態와 主要政策課題』, 한국개발연구원, 1992.
-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3.
- 金杵三, “삶의 質과 地域開發政策에 관한 研究,”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의논문, 1900.
- 김상관 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총서 4, 나남출판, 1996.
- 보건복지기획단,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1996.
- 安國臣, “韓國의 經濟發展과 所得分配,” 『經濟發展研究』, 창간호, 1995.
- 이경태 편, 『한국의 선진화 지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총서 7, 나남출판, 1996.
- 통계청, 『한국의 사회 지표』, 1996.
- 李相湖, “快適한 삶 : 環境 側面의 삶의 質” 『韓國行政研究』, 第5分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1996.
- 李源德 外, “社會保障과 勤勞福祉,” 안병직 엮음, 『한국경제: 쟁점과 전망』, 지식산업사, 1995.

- 李殷雨, “都農間 所得隔差의 實態와 原因,” 『經濟發展研究』, 한국경제발전학회, 창간호, 1995
- , “低所得層의 經濟的 特性에 관한 地域間 比較分析,” 『經濟發展研究』, 한국경제발전학회, 제2권, 1996.
- 李廷雨, 『所得分配論(제2판)』, 비봉출판사, 1997.
- 林煥燮, “삶의 質의 概念的 論議” 『韓國行政研究』, 第5卷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1996.
- 鄭日煥, “豊饒로운 삶 : 教育, 文化 側面의 삶의 質” 『韓國行政研究』, 第5卷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1996.
- 趙成漢, “公平한 삶 : 經濟的 側面의 삶의 質” 『韓國行政研究』, 第5卷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1996.
- 趙賢濟,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울산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下)』, 韓國開發研究院, 1979, 1982.
- 주학중, 윤주현, “1982년 계층별 소득분배의 추계와 그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 1984년3월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 (II)』, 1995.